

재정패널 소식지

2018년 제 1호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한 국 조 세 재 정 연 구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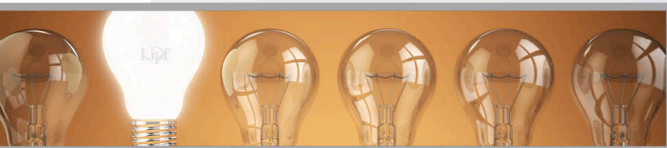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재정패널 소식지

2018년 제 1호

한 국 조 세 재 정 연 구 원



재정패널 소식지

2018년 제 1호

재정패널 조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단위의 조사로 우리나라 가계의 재정·조세·복지 현황 등을 파악하고, 관련 정부 정책의 효과 검증을 위해 설계된 패널조사입니다.

Contents

재정패널 소개	04
공식자료 이용안내	06
재정패널 상반기 소식	08
9차년도 재정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요약	11
2016~2017 재정패널 활용 연구 요약	18
2017 재정패널 활용 기사	3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 조세·재정·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국가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재정패널 조사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단위의 종단조사
- 조세 및 재정 정책의 효과 검증, 가계 조세부담 및 복지수혜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설계
- 2018년 현재 11차년도 조사 준비 중

조사 대상

- 전국 15개 시도에서 추출된 5,634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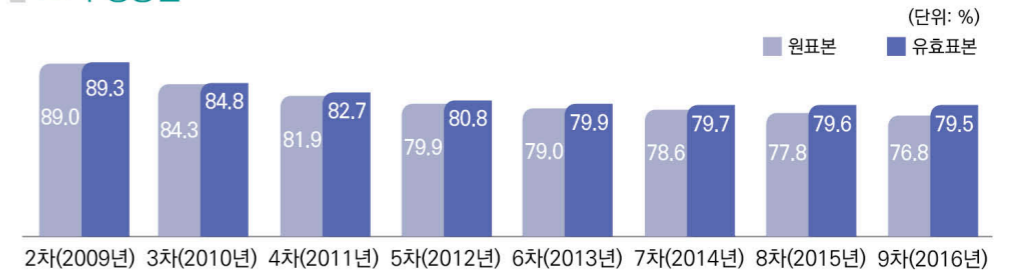
조사 영역

- 납세 및 복지, 지출 및 소득, 자산 및 부채, 경제활동상태, 소득공제내역, 사회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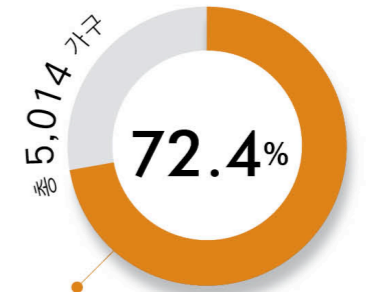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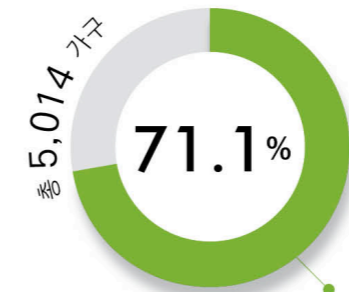
조사 특징

- 1) 납세자의 소득신고서류 수집을 통한 자료 생성
 -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소득신고서류 수집
 - 항목별 소득공제액 또는 세액공제액, 결정세액 정보 제공
- 2) 안정적으로 패널을 유지하며 매년 높은 조사 성공률 보유
- 3) 개인의 사회 및 납세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수행

조사 성공률



- 원표본 조사 성공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조사 성공률
- 유효표본 조사 성공률: 전체 가구 중 조사가 불가능한(사망, 해외이민)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산출한 조사 성공률



문의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패널센터
044-414-2225 / 2473
panel@kipf.re.kr

- 재정패널 공식 홈페이지
<http://panel.kipf.re.kr/>

재정패널 공식자료

- 1) 제공 범위 : 1-9차 데이터, 기초분석보고서, 테크니컬 리포트
- 2) 제공 방식 : 공식 홈페이지 및 KOSIS를 통한 주요 결과 공개
- 3) 10차 자료 : 2018년 12월 재정패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예정

재정패널 공식 홈페이지

- <http://panel.kipf.re.kr/>
- 간단한 회원 가입 후 자료 및 보고서 다운로드 가능



SMART NaSTaB이란?

- 재정패널자료의 가공 시간을 단축시키고, 오류 없는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구축한 STATA 프로그램

SMART NaSTaB 프로그램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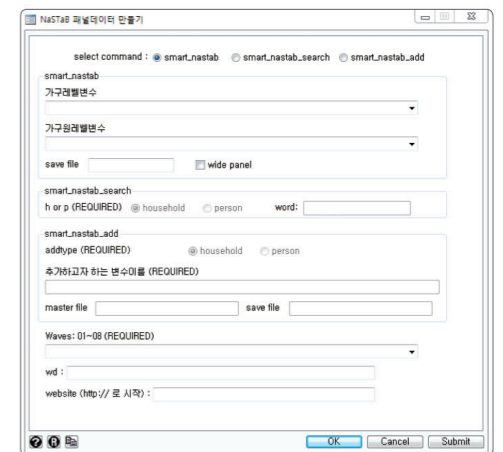
- 연도별, 가구별, 가구원별 데이터 병합
- 소득 및 지출 등 생성 변수 추출

SMART NaSTaB 다운로드

- 재정패널 홈페이지 > 데이터 정보 > SMART NaSTaB (다운로드)

SMART NaSTaB 이용

- STATA 13.0버전 이상에서 구동가능
- 대화창 및 명령구문을 통해 활용 가능



< 대화창을 통한 SMART NaSTaB 이용화면 >

재정패널 상반기 소식

재정패널 이슈

- 9차년도 재정패널 공식 자료 공개
 - 2017년 12월, 9차년도 재정패널 자료가 홈페이지(panel.kipf.re.kr)에 공개되었습니다.
 -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11차년도 재정패널 현장 조사 실시
 - 2018년 11차년도 조사가 5월부터 진행됩니다.
 - 패널 가족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행사 소식

- 2018 재정패널 데이터 설명회 개최
 - 개최 일시 : 2018년 4월 4일 (수) 14:00~16:00
 - 개최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 참가 접수 : 2018년 3월 30일까지 panel@kipf.re.kr로 참가 신청서 작성 후 전송

논문 모집

- 2018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및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 원고 모집
 - 2018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및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에 참가할 우수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 연구계획서 모집기간 : ~ 4월 20일(금)
 - 참가 신청 방법
 - ① 재정패널 홈페이지 학술대회 참가 신청 페이지에서 연구계획서 등록
 - ② 연구계획서(홈페이지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panel@kipf.re.kr 송부

2018 데이터 설명회 개최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aSTaB

2018. 4. 4. (수) 14:00-16:00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프로그램

시 간	프로그램	강사
13:00 - 14:00	등록	
14:00 - 14:15	재정패널조사 자료 소개	내부 연구진
14:15 - 14:45	재정패널조사 자료 구성 및 유의사항 안내	내부 연구진
14:45 - 15:00	휴식	
15:00 - 16:00	패널데이터 분석 기법	고려대 한치록 교수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panel@kipf.re.kr) 접수
- 신청 마감 : 2018년 3월 30일(금요일)까지
- ※ 별도의 참가비용은 없습니다.

문의 및 신청

- 재정패널 DB 사업팀 : 044-414-2225/2473
- 재정패널 이메일 : panel@kipf.re.kr
- 재정패널 홈페이지 : http://panel.kipf.re.kr

2018

재정패널 학술대회 및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aSTaB Conference

일반연구자 학술대회

- 대상논문 :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학술논문
- 참가자격 :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연구자
- 원 고 료 : 논문 제출 후 발표시 100만원 지급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

- 대상논문 :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학술논문
- 참가자격 : 국내외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졸업예정자 포함)
- 상 금 : 최우수상(○편, 200만원), 우수상(○편, 100만원), 장려상(○편, 70만원)

일정

- 재정패널 데이터 설명회 : 2018년 4월 4일 (수)
- 연구계획서 모집 마감 : 2018년 4월 20일 (금)
- 최종 논문 제출 마감 : 2018년 7월 30일 (월)
- 학술대회 : 2018년 9월 14일 (금)

신청(공통)

- 신청서류 : 연구계획서
- 제출방법 : 재정패널 이메일(panel@kipf.re.kr) 또는 홈페이지(http://panel.kipf.re.kr)를 통해 연구계획서 제출

9차년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요약

재정패널
소식지

표본 구성

- 9차년도 표본구성

구분	최초 표본가구	추가 표본가구	2-8차년도 분가가구 추적	2015년 6월 이전 분가가구	2015년 7월 이후 분가가구	총합계
전국	3,813	515	466	38	32	4,864

- 원 표본가구 유지율

구분	원표본 지역별 가구수	2016년도 추적조사 성공 표본수	원표본가구 유지율
전국	5,634	4,328	76.8

9차년도 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4,864가구가 표집 되었다. 2008년도에 구축되었던 원 패널가구 중 2016년도에도 조사에 성공하여 패널로 유지된 가구는 모두 4,328가구로 패널 유지율은 76.8%이다. 소득과 자산, 세금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점과 수도권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할당된 표본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비교적 양호한 유지율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다.

표본가구 인구학적 특징

본 조사에서 가구는 2015년 한 해 동안 6개월 이상 함께 살았던 가족으로 정의한다. 단, 6개월 이상 동거한 가족 및 친척은 가구원에 포함시켰으며 6개월 이상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대학생 이하의 미혼 가구원이 학업을 목적으로 분가한 경우와 원양 어선이나 기숙사 등 수용시설에 있는 가구원의 경우에는 가구원으로 인정하였다.

- 가구의 성별 및 연령대

단위(%)	성별		연령대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2015년	78.5	21.5	2.8	13.7	25.2	24.4	33.9
2016년	77.8	22.2	2.0	11.9	23.4	25.3	37.3

- 가구원 수

단위(%)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2015년	18.3	24.9	21.5	26.9	8.5
2016년	18.9	26.0	21.1	26.2	7.8

2016년 전체 가구주 성별 및 연령대 비율을 2015년과 비교해보면 별 차이 없이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60대 이상 연령대의 가구주 비율이 다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 가구원의 성별 및 연령대

단위(%)	성별		연령대					
	남자	여자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015년	48.4	51.6	22.7	10.8	12.0	17.4	15.5	21.5
2016년	48.3	51.7	21.8	11.2	11.5	17.0	16.2	22.3

가구원 중에서는 여자의 비중이 약간 더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가구원의 비중이 가장 높고 19세 이하 가구원이 그 다음으로 많이 조사됐다.

가구 조사표 결과 요약

• 가구 평균 연소득

항목	전체가구 평균 금액	항목	전체가구 평균 금액
근로소득	3,022.2	양도소득/손실	
사업소득	949.6	양도소득	10.0
부동산 임대소득		양도손실	1.4
토지	4.3	보험급여	
주택	61.1	사회보험 급여	91.6
상가 및 사무실	60.3	민간보험 급여	32.0
기타	1.2	정부지원	
이자 및 배당소득	12.5	정부지원 현금소득	80.0
기타소득		퇴직관련급여	
타가구 이전소득	104.8	특수직 퇴직연금	80.0
노인요양특별급여	0.1	특수직 퇴직일시금	2.1
그 외 기타소득	51.3	개인형 퇴직연금	2.2
		개인형 퇴직연금(일시금)	26.1
항목		전체가구 평균 금액	
연간총소득		4,595.7	

재정패널 표본가구 전체의 평균 연간소득을 구하기 위해 가구원 조사표에서 조사된 연간 소득의 총 금액을 총 유효표본 가구 수(4,832가구)로 나누어 보았다. 분석 결과 재정패널 조사 표본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595.7만원으로 나타났고 그 중 근로소득이 평균 3,022.2만원이었으며 사업소득이 949.6만원으로 나타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가구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 가구 금융자산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자산(만원)
	비율(%)	평균 금액(만원)	
은행 등 금융기관 예적금	76.3	3,491.0	2,664.5
펀드 가입 금액	4.0	2,693.7	106.5
채권 보유 금액	0.6	5,947.4	33.2
주식 보유 금액	5.6	4,830.8	272.0
저축성 보험, 연금성 보험	13.8	2,602.9	357.4
빌려준 돈	7.4	2,218.9	163.2
기타 금융자산	1.1	7,519.2	82.5
금융자산 총액			3,679.3

금융자산 중에는 금융기관 예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76.3%로 가장 컸으며, 전체 표본가구의 금융자산 평균 총액은 3,679.3만원으로 나타났다.

• 가구 부동산자산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자산(만원)
	비율(%)	평균 금액(만원)	
거주 자가주택 시가총액	61.7	24,840.2	15,310.4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	12.4	30,856.8	3,764.3
주택 외 보유 부동산(토지)	13.5	23,255.0	3,075.2
주택 외 보유 부동산(건물)	3.9	52,598.9	1,993.7
주택 전월세 보증금(거주)	29.6	9,304.1	2,755.4
주택 전월세 보증금(비거주)	0.5	7,906.5	37.6
비주택 전월세 보증금	3.4	3,499.1	118.8
부동산 자산 총액			27,055.4

부동산자산 중에는 거주하고 있는 자가주택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으며, 전체 표본가구의 부동산자산 평균 총액은 2억 7,055만원으로 나타났다.

• 가구 부채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부채(만원)
	비율(%)	평균 금액(만원)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1.9	5,833.7	111.1
학자금 대출	1.8	1,349.1	23.7
금융기관 주택담보 대출	18.1	10,145.2	1,837.5
금융기관 대출	11.7	6,275.6	734.0
신용카드 대출	1.4	2,406.7	33.4
전세금/보증금	14.3	11,881.1	1,662.4
기타	1.0	4,460.8	45.2
부채 총액			4,447.3

부채는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전세금·보증금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는 4,447.3만원으로 나타났다.

■ 가구원 조사표 결과 요약

• 소득활동 현황

소득 활동함(%)		소득활동 하지 않음(%)	
78.1		21.9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구직(%)	비구직(%)
68.9	31.1	8.4	91.6

• 경제활동 상태

구분	세부항목	분포
종사상 지위	상용직 근로자	53.4
	임시직 근로자	8.7
	일용직 근로자	6.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2.9
	고용원을 둔 사업주	3.9
	무급 가족 종사자	4.2
	근무시간 형태 (임금근로자)	전일제
	시간제	7.1

가구원 조사표에 응답한 가구원 중 소득 활동을 하고있는 가구원의 비율은 78.1%로 나타났고, 그 중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68.9%,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은 31.1%로 나타났다.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원도 임대소득, 금융소득, 정부지원금 등이 있을 경우 가구원 조사표의 조사대상이 되므로 소득활동이 없는 가구원이 조사된 경우는 2.19%로 나타났다.

• 가구원 연간 소득

항목	소득 가구원		조사 가구원 평균 금액(만원)	
	비율(%)	평균 금액(만원)		
근로소득	57.5	3,256.5	1,871.5	
사업소득	21.4	2,762.2	588.8	
부동산 임대소득	토지	0.4	685.6	2.6
	주택	3.9	974.1	37.8
	상가 및 사무실	1.9	1,941.8	37.3
	기타	0.1	1,196.8	0.8
이자 및 배당소득	2.0	377.4	7.7	
기타소득	타가구 이전소득	12.7	509.9	64.8
	노인요양특별급여	0.0	250.0	0.0
	그 외 기타소득	3.3	963.9	31.7
양도소득 /손실	양도소득	0.2	2,678.7	6.2
	양도손실	0.1	2,333.3	0.9
보험급여 /정부지원 /퇴직급여	사회보험 급여	11.3	501.5	56.7
	민간보험 급여	4.2	473.6	19.8
	정부지원 현금소득	19.5	268.8	52.3
	특수직 퇴직연금	1.7	2,951.5	49.5
	특수직 퇴직일시금	0.0	3,366.7	1.3
	개인형 퇴직연금	0.1	1323.4	1.4
개인형 퇴직금(일시금)	0.6	2743.2	16.2	
연간 총소득*			2,846.4	

가구원 개인 연간소득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조사 가구원의 평균 연간소득은 2,846.4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종류별로는 근로소득자의 평균소득이 3,256.5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납세자 의식조사 결과 요약

• 조세·복지제도에 대한 인식

▷ 본인 세 부담 평가

구분	항목	분포(%)
본인 경제적 능력 대비 세 부담 평가	매우 많이 납부한다	5.5
	약간 많이 납부한다	36.2
	적절하게 납부한다	52.4
	약간 적게 납부한다	4.5
	매우 적게 납부한다	1.4
본인납부 세금 대비 정부 혜택 평가	매우 높은 수준	0.5
	약간 높은 수준	10.9
	적당한 수준	45.2
	약간 낮은 수준	32.9
	매우 낮은 수준	10.5
소득 유사 그룹 대비 본인 세 부담 평가	매우 높은 수준	4.0
	약간 높은 수준	36.4
	적당한 수준	54.9
	약간 낮은 수준	4.0
	매우 낮은 수준	0.6

본인의 세금부담에 대한 평가에서는 적절하게 납부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절반 가까이 나왔으며 본인이 납부하는 세금에 비해 정부의 혜택이 적당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45.2%로 가장 높았고 낮은 수준(약간 낮은 수준 +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43.4%로 그 뒤를 이었다.

▷ 소득격차 및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구분	항목	분포(%)
우리나라 계층 간 소득 격차	매우 크다	38.4
	약간 크다	49.5
	보통이다	11.1
	별로 크지 않다	0.8
	전혀 크지 않다	0.1

구분	항목	분포(%)	
향후 우리나라 계층 간 소득 격차	매우 커질 것이다	39.1	
	약간 커질 것이다	49.7	
	보통이다	10.3	
	약간 작아질 것이다	0.8	
	매우 작아질 것이다	0.1	
소득 격차 줄이기 위해 중요한 요소	정부 정책	①	28.9
		②	43.0
		③	21.5
	개인 노력	④	5.9
		⑤	0.7

우리나라 계층 간 소득 격차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 크다고 응답한 사람이 87.9%(매우 크다+약간 크다)로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크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우리나라 계층 간 소득 격차 역시 커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8.8%로 조사되었다.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1.9%(매우 중요+대체로 중요)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세 부담과 복지 수준 비교 평가

구분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수준 (%)	바람직한 수준(%)
저부담 - 고복지	2.6	11.9
중부담 - 고복지	6.1	26.4
고부담 - 고복지	1.4	4.7
저부담 - 중복지	10.5	12.4
중부담 - 중복지	33.3	39.0
고부담 - 중복지	7.9	2.1
저부담 - 저복지	8.9	1.1
중부담 - 저복지	20.4	1.8
고부담 - 저복지	8.8	0.6

세 부담과 복지 수준에 대한 비교 평가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은 중부담-중복지로,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www.panel.kipf.re.kr

■
—
■
■
—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
—
■
■
—

2016~2017

재정패널 활용 연구 요약

최근 1년간 발표된 재정패널 활용 연구들의
초록입니다. <편집자 주>



주택가격상승률이 주택보유기간에 미치는 영향

강성훈

『주택연구』 25(4): 05-19

In Korea, the sale of a house for less than 900 million won is exempted from capital gains tax. The purpose of this tax exemption is to preserve residential mobility and guarantee stability. To receive the benefits of this tax exemption, the owner of a house for a family must have the house for at least two years, but there is no condition on the minimum occupancy period. Due to the absence of the residency requirement, people may have an incentive to sell the house to primarily obtain capital gains. In this paper, I test whether housing price growth affects housing tenure. The finding strongly shows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price growth and housing tenure. This is the indirect evidence that highlights the possibility of someone selling the house in order to obtain capital gains. Thus, in this paper, to avoid demand-side speculation in the housing market resulting from the capital gains tax exemption, I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introduce a residency requirement for the tax exemption.



노후빈곤율의 진단과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빈곤 개선

김대환 · 이봉주 · 류건식

『보험학회지』 110: 1-29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18~65세 연령층의 빈곤율은 9.6%로 OECD 평균 10.5%보다 낮지만,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 11.4%를 훨씬 상회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계자산 중 74.0%가 실물자산일 정도로 부동산자산이 많고, 최근 2011~2015년 동안 60세 이상 아파트 구매자의 증가폭이 전체 아파트 구입자 평균 증가폭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 소득을 축적한 후 이를 통해 부동산 자산을 구매하고 있는 고령자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고령자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기존의 빈곤율과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빈곤율은 51.76%에서 38.76%로 13.00%p 감소하는 반면 빈곤갭은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즉, 한국 노인층은 소득과 자산 모두에서 일반적으로 빈곤한 것은 맞지만 상당수는 빈곤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소득보다는 자산 측면에서 양극화가 더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가 분석에서는 노인빈곤율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연금제도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함에도 미가입자들은 주택연금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려는 유인이 강해 주택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노인인구가 급증하므로 주택연금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빈곤율을 낮추는 동시에 재정 및 복지지출을 소득도 낮고 부동산 자산도 없는 진정한 빈곤층에 집중시키는 정책이 요망된다.

공무원연금 납부 가구의 경제행태 분석

김보민 · 송헌재

『한국노동경제논집』 39(4): 59~80

본 연구는 재정패널을 이용하여 공무원연금 납부 가구의 경제행태를 국민연금 가구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공무원연금 가구의 소득은 국민연금 가구보다 평균적으로 높다. 둘째, 공무원연금 가구 순자산은 국민연금 가구보다 현격히 작다. 이는 공무원연금의 저축구축효과 뿐만 아니라 공무원 가구의 상속자산이 공무원연금 가구보다 높은 데에서 기인할 수 있다. 셋째, 공무원연금 가구의 월 소비 지출은 국민연금 가구보다 유의하게 높다. 기초통계량 분석과 고정효과분석을 통하여 공무원연금 가구 효과가 유의하게 존재함을 볼 수 있다. 공무원연금 가구의 순자산이 작고 월 소비 지출이 큰 이유는 해당 가구가 안정적이고 지급률이 높은 공무원연금소득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축의 필요성을 덜 느끼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소득빈곤 및 자산빈곤의 이행추이 분석

김성태 · 김명규 · 임병인

『재정학연구』 9(3): 127-156

본 연구는 재정패널 1-7차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을 소득과 자산기준으로 4분한 뒤, 소득빈곤과 자산빈곤에 동시에 직면하는 구조적 빈곤과 소득은 빈곤하나 자산은 빈곤하지 않은 확률적 빈곤에 초점을 맞추어 그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시장소득 기준구조적 빈곤율은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구조적 빈곤계층은 부채가 부동산자산 및 금융자산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아 일단 소득빈곤에 떨어지면 자산이 거의 없어 말 그대로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확률적인 빈곤계층은 구조적 빈곤계층에 비하여 자산규모는 현저하게 많고, 부채도 작아 자산구조가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셋째, 이행확률의 추이를 보면 확률적 빈곤계층은 일시적 소득빈곤 상태에 있음이 확인되었음에 반해, 구조적 빈곤계층은 빈곤 함정에서 벗어날 확률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구조적 빈곤계층은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빈곤에서 벗어나더라도 단기적으로 자산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정책적 시사점은 구조적 빈곤을 개선하여 일정 기간 확률적 빈곤 또는 자산 비빈곤계층으로 이행시키려면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더 나아가 빈곤계층의 부채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소득계층별 세 부담 차이 분석

김진석

『세무와 회계저널』 17(5): 175-198

본 연구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의 개정이 소득계층별로 미치는 세 부담 차이를 분석한 것으로, 제5차 재정패널 자료 중 근로소득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소득분위를 10분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재정패널의 부족한 자료는 전수 자료인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특별공제 항목의 경우 2007년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특히 1인당 특별공제액은 근로소득자 전체의 평균 1인당 공제액보다 상위 10%의 평균 1인당 공제액이 2배 가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 부담에 역진적인 소득공제의 특성상 개정 전 소득공제제도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소득계층별 세 부담 차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계층 10분위 중 5분위부터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을 적용한 세 부담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발표 및 기존 연구와 다른 결론으로 근로소득공제의 축소, 자녀세액공제로의 통합 및 세액공제 전환된 항목 중 일부 항목의 12% 세액공제율 적용 등으로 총급여액 4,600만 원의 소득수준부터 세 부담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세 부담이 더욱 증가하여 고소득층의 실효세율이 증가하므로 세 부담 형평성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소득공제제도가 갖는 단점인 세 부담의 역진성의 완화를 위해 세액공제도로 전환한 점은 바람직한 세제개편방향이지만, 소득공제제도 전체에 대한 점검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소득공제제도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다양한 납세자의 소득, 소비 등의 패턴이 잘 반영될 수 있어야 하므로, 공제항목별 특성을 고려한 후 다양한 소비 형태 등이 반영되어 응부담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소득공제제도 전체를 점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자산과 소득에 따른 차별출산력 연구

김현식

『한국인구학』 40(3): 51-78

최근 15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초저출산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이 연구는 자산과 소득변수가 자녀 순위별 출산율에 주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대표적인 생존 분석 모형인 콕스비례위험모형과 이산시간위험모형을 활용하여 재정패널 1-7차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산과 소득은 거주형태, 거주주택 외 주택소유여부, 주택 외 부동산 소유 여부, 금융자산의 크기, 부채의 크기, 가구소득으로 측정하였다. 이 연구의 발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 출산에 있어 월세 및 기타 형태의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은 자가나 전세에 거주하는 여성에 비해 낮은 출산 위험을 보이며 금융자산이 많은 여성은 금융자산이 없는 여성에 비해 출산 위험이 떨어진다. 둘째, 자녀 출산에서는 부채가 없는 여성에 비해 부채가 많은 여성이 출산 위험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셋째, 자녀 출산에 있어서는 가구소득에 따른 출산 위험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출산 위험이 떨어지는 일관된 규칙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발견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서 하나의 생애과정이론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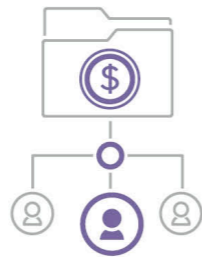


소득계층 이동성 추이의 Markov과정 분석

박재완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7(4): 63~90

한국노동패널조사와 재정패널조사에서 도출한 연간 기준 소득계층 이동 추정치에 'Markov과정'의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외환위기와 세계금융위기 이후 소득계층의 이동성 추이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첫째, 장기균형 수렴 속도가 빠르고 소득계층 이동이 활발했다. 둘째, 두 차례 경제위기 이후 계층 이동성이 저하됐다. 셋째, 장기균형의 소득계층별 점유율은 대체로 중산층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뤘지만, 가구주 연령이 60세 미만인 '근로가능가구'의 경우 고소득층이 두터웠다. 넷째, 시간이 흐를수록 소득계층 분포가 양극화 추이를 보인다. 다섯째, '근로가능가구'는 이동이 왕성하고 그 방향도 상향이동에 집중됐다. 여섯째,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을 포함한 시장소득의 분포가 더 바람직했다. 일곱째, 정부개입 이후 총소득분포는 약간 개선됐지만, 보편적 복지 확대가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개연성도 관측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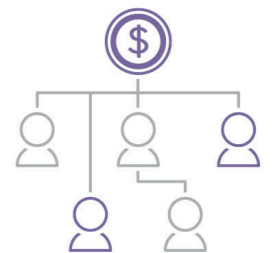


가계부채와 기혼여성 노동공급의 관계 분석

송헌재 · 신우리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40(1): 37~68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부채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사이의 관계를 석하였다. 이를 위해 가구의 이자비용 납부액 대비 가구금융부채 금액을 이용하여 가구의 유효이자율을 추하였다. 금융부채가 없는 가구의 경우 Heckman Selection 모형을 적용하여 가구의 이자율을 추정하였다. 실증 분석결과 가구에서 부담하는 유효이자율이 상승하게 될 경우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로부터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예상할 수 있는 정적인 시나리오를 가구 노동공급 증가와 근로소득의 상승효과를 통해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여금에 대한 개별 소득탈루율의 결정요인 분석

신규수

『사회보장연구』 32(3): 125-157

본 연구는 재정패널 5-6차의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기여금에 대한 가입대상자 개인별 법정소득대비 탈루소득을 의미하는 기여금에 대한 개별 소득탈루율을 구하고 이의 인구 사회경제학적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로 다른 탈루율의 추정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소득원별 분석 결과, 이러한 소득원별로 탈루유형에 따른 결정요인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탈루유형 즉, 가입·납부여부를 의미하는 '소득신고'와 소득신고자의 축소신고여부를 의미하는 '소득축소신고'로 나누어 로짓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와 달리 소득신고 시 소득여하에 따라 유의미하게 소득신고율이 증가하지 않고 가구주에 해당할 경우, 18세미만 자녀수가 적을수록 증가한다. 둘째, 소득신고 시에는 고소득층의 신고율이 높으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모두 일단 가입을 한 경우는 소득이 높을수록 축소신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 다. 마지막으로 소득미신고자를 탈루율 1로 성실납부자의 탈루율을 0으로 하는 코너솔루션과 종속변수가 비율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Zero and one inflated beta 회귀 모델로 분석한 결과 축소신고자의 탈루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기여금의 탈루로 인해 제약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조세 공정성 인식과 공공서비스의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에 대한 납세자의 태도 분석

: 통일세에 대한 선호도를 중심으로

신나리 · 이영한 · 박기백

『회계학연구』 42(6): 159-194

정부와 국민들의 사회적 교환거래에서의 조세의 역할을 분석해온 납세순응 연구들은 정부가 합리적인 조세부담 수준으로 납세자들이 더 선호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확신이 높을수록 납세자들의 납세의향이 높아지며 이러한 납세의향은 공공재의 기간별 소비행태, 조세공평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통일세는 이 세금으로 마련된 공공서비스의 기대수혜시기가 불확실한 장기이고 기대수혜자가 납세자 본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통일세의 납세의향을 복지재정지출과 같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재정지출 선호도와 비교해볼 경우 조세와 공공서비스의 사회적 교환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연구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제5차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납세자의 사적재 소비 행태가 공공재의 기간별 소비행태에도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조세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수직적 공정성, 수평적 공정성, 교환적 공정성으로 구분하여 각 요소가 공공재의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령별로는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통일세 납세의향과 복지재정지출 선호도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저축성향과 통일세에 대한 선호도의 경우 예상과 달리 음의 관련성을 보여서 사적재화에 대한 소비 및 저축행태가 통일비용 지출과 같은 불확실한 공공서비스에서는 유지되지 않으며 경제적 요인외에 사회, 심리적 요인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통일세의 선호도 및 납세의향에 정의 관련성을 보여서 공정성 인식이 통일세 납세순응도 제고와 관련성이 있음도 발견하였다. 또한 고소득자, 고령층이 통일세 선호도가 높아, 경제적 동기보다 민족의식과 같은 심리적 동기가 작용하는 것을 보였으며 청년층의 경우는 통일세 담세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샤플리값을 이용한 한국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원천별 기여도 분석

이성재 · 이우진

『한국경제의분석』 23(1): 57-109

본 연구에서 우리는 협조적 게임이론에서 사용되는 샤플리값(Shapley value)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에 대한 원천별 한계기여를 추계한다. 샤플리값을 이용한 분해를 적용할 때 우리는 Chantreuil and Trannoy(1999)를 따라 두 가지 법을 사용한다. 첫 번째 방법은 영점 샤플리값 분해(zero Shapley value decomposition method)로 원천별 한계기여를 계산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여타 원천들의 값으로 0을 부여한 후 각 원천별 한계기여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평균 샤플리값 분해(mean equalized Shapley value decomposition method)로 모든 사람들에게 여타 원천들의 값으로 각각의 평균값을 부여한 후 원천별 기여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후자의 방법에서는 원천별 점유율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전자의 방법에서는 원천별 점유율이 역할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재정패널 7개년(2008~2014년) 자료를 사용하여 전체집단에 대해서뿐 아니라 연령대별로도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원천별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전체집단에 대한 분석 결과를 재정패널 2014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불평등에 대한 원천별 기여를 살펴보면 평균 샤플리값 분해를 이용한 경우에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노동소득의 절대기여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자산소득의 기여도는 4.2%로 나타나 노동소득의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영점 샤플리값 분해를 이용하면 자산소득의 기여도가 약 80%를 차지하고 노동소득의 기여도는 -35.3%로 나타나 자산소득의 불평등이 전체소득불평등의 주요인이며 노동소득은 오히려 전체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자산불평등에 대한 원천별 기여를 살펴보면

평균 샤플리값 분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자산의 기여도 (약 80% 이상)가 금융자산의 기여도 (12%)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영점 샤플리값 분해를 사용하면 금융자산의 기여도 (약 40%)가 부동산자산의 기여도(28%)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대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도가 증가하는데, 그 주요 원인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산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자산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동산자산의 기여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그 중 현 거주주택자산의 기여도가 높아진다. 반대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전월세 보증금의 기여도가 높아진다.



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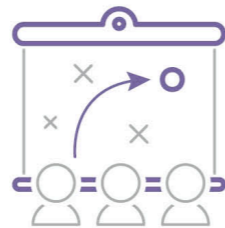
오창수 · 장현국

『리스크관리연구』 28(4): 93~127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패널조사(2차~8차년) 자료를 이용하여 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하우스만 검정을 실시하여 고정효과 패널로지스틱모형을 적합한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보험 가입 요인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 일정한 연령까지는 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아지다가 그 이후에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일 경우, 공적연금·개인연금에 가입한 경우, 가구부채가 있는 경우, 개인소득·의료비 지출·예적금·순자산이 많을수록 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 가구,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일 경우 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고령자, 저소득자, 임시직 근로자, 공적연금 미가입자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이 보험 가입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들에 대해 보험회사는 취약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기능과 저렴한 보험료를 갖춘 보험상품 개발을 통해 신규 수요를 창출하여 고령화·저성장 시대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자가가구의 주택자산 효과에 관한 연구

최우섭 · 서원석

『한국지역개발학회 2017년 추계종합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81-289

본 연구는 자가 가구가, 금융자산과 같은 일반적인 자산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금액, 돌려줘야 할 보증금과 같은 부채성격의 자산이 총지출에 미치는 영향과 다주택여부와 담보대출금액, 거주주택가격, 다주택가격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다주택자의 자산효과를 엄밀히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재정패널데이터6차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패널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가가구는 주택담보대출이나, 돌려줘야 할 보증금과 같은 부채성격의 항목을 자산으로 인식해, 양의 자산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에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와 비교했을 때, 주택담보대출이 상승할 시에 음의 자산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다주택자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가격에 따른 자산효과가 단 주택자에 비해 다주택자가 높은 것으로 보아, 다주택자의 소비 변동 폭이 단 주택자보다 큰 것으로 추정됐다.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재정패널 활용 기사 목록

재정패널
소식지

기사제목	신문명	일자
한국 실질 소득세율, 4.3% 불과...부과액 3분의 2가 '연말정산' 환급	조선비즈	2017-09-15
공무원, 민간보다 적게 일하고 임금은 더 많아	한국일보	2017-10-02
저소득층일수록 기부금 더 내면 부모님 용돈 더 드린다	헤럴드경제	2017-10-04
자녀 많을수록 세금 줄고, 결혼도 세부담 낮춰... 3자녀 이상 가구 평균 실효세율 4.4%...1자녀보다 1.5%p 낮아	서울신문	2017-10-04
재분배 요구 커지면 보수·진보 갈등 심화... 분배 선호 영남↓·호남↑	SBS뉴스	2017-10-05
'대물림되는 가난'...저소득층 빈곤탈출 확률 갈수록 낮아져	연합뉴스	2017-10-07
정규직 남성 결혼 확률, 비정규직의 4.6배 높아	세계일보	2017-10-08
저소득층 빈곤탈출 확률 갈수록 낮아져	충남일보	2017-10-10
가난한사람이부자보다더많은세금을낸다...'역진세'	시선뉴스	2017-11-06
[결혼도 이제 특권] 30대 남성, 월소득 100만원 당 결혼 확률 12.4%p씩 올라간다	조선비즈	2017-11-21
불황 속 '복권 열풍'...저소득층 돈으로 지탱	세계일보	2017-12-31
3040세대 순자산 가치 5년새 뚝...노후대비 '빨간불'	서울경제	2018-01-07
"복지 자원조달, 대기업 법인세 인상해야"	뉴스토마토	2018-01-09

최근 6개월간 언론기관을 통해 보도된 재정패널 관련 기사들의 목록입니다.



한 국 조 세 재 정 연구 원

발 행 일 : 2018. 03. 21

발행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패널센터

주 소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반곡동)

배포문의 : panel@kipf.re.kr , 044-414-2225/2312

홈페이지 : <http://panel.kipf.re.kr>